"'강제동원 정부안' 절대 안돼" 국민들 함께 싸운다

시민모임, 15~16일 양금덕 할머니와 전국 500곳서 1인 시위
광주·전남 100여명 참여…피해자 의견수렴 2차 토론회 요구도

"광산구 우산동 메가박스 아랫길 교차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피켓 신청합니다.", "고양시는 (피켓)따로 만들어볼게요 친환경적으로~", "한 번도 안 해 봐서 쑥스러우니 다른 사람 조금 옆에서 하면 안될까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인 '제3자 대위변제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변호인을 제외하고 직접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해법안을 강행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는 최근 피해 당사자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여러 차례 요청해 왔다"며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절차적 명분을 갖추기 위한 마지막 요식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 면담 요청에 앞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차 TV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공개토론회는 안내문·발제문조차 없고 발언시간도 5분으로 제한해 파행을 맞았는데, 시간 구애 없이 충분히 피해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TV토론회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시민모임 측은 또 15일~16일 이틀간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하는 전국 500곳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정부의 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규합에 나선다.

시민모임은 시위에 앞서 참가자들을 위해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싸웁시다', '강제동원 굴욕 해법 함께 폐기시킵시다' 등 내용이 담긴 피켓 시안을 배포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장소에서 1시간 안팎으로 진행하는 식이며, 인증샷 등을 남길 필요 없이 자유롭게 연대 의지를 표현하면 된다고 시민모임 관계자는 전했다. 시위에는 시민모임 후원 회원뿐 아니라 강제동원 문제에 관심 있는 전국 단체와 개인이 동참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후 6시 현재 광주·전남지역 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에만 46곳의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개인 참가자까지 합치면 광주·전남 지역 100여명이 1인시위에 동참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광주·전남 이외에 고양, 서울 등 전국적으로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국언 시민모임 이사장은 "강제동원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마음 속으로 응원·격려해 왔던 전 국민들이 피해자 할머니들과 직접 연대하는 첫 시도다"며 "뜻이 있거나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에는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출범하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양금덕 할머니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에는 양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을 외신에 전달할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일본·중국·미국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신 기자들이 참석해 양 할머니가 겪은 과거 아픔과 현재의 어려움, 피해자 목소리를 배제한 정부해법안의 문제점 등을 들을 예정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회원들이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장관의 사과와 피해자 의견 수렴을 위한 2차 TV토론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시민모임을 비롯한 전국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외교부 규탄 3차 행동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 달 1일 3·1절에도 규탄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민모임은 이날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3·1절 자주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에 올라가지 않은 시민모임 회원들은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최하는 '3.1절 자주와 평화로 가는 길' 행사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국언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의 사죄, 배상을 요구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신 뒤집어쓰겠다고 하고 있다"며 "굴욕적인 해법안을 피해자 면전에 들이밀며 설득하겠다는 것은 '횡포'이며 피해자를 모욕하고 괴롭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바람에 화답하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

"'다회용기 회수로봇' 답답해서 못 쓰겠다"

회수 속도 느리고 오작동에 이용 꺼려…기계 옆 쓰레기통만 가득
서구청 "내달 속도 향상된 기기 배치…환경보호 차원에서 이해를"

13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광주 서구청 1층 로비. 점심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즐기러 온 이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다회용기 회수로봇'〈사진〉이 눈에 띄었다. 카페에서 다회용 컵에 음료를 받은 뒤, 컵을 회수하고 재활용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설치된 로봇이다.

의도는 좋았지만, 정작 이날 점심시간이 끝나가도록 회수로봇을 이용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모두 회수로봇 옆에 별도로 설치한 쓰레기통에 컵을 버리고 있었다. 회수로봇이 너무 느려서 도저히 이용할 마음이 안 든다는 것이다.

서구청을 비롯해 광주지역 공공기관에 설치된 다회용기 회수로봇이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수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종종 다회용 컵을 회수 가능 컵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례가 잇따르니 답답해서 못 쓰겠다는 것이다.

서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에 걸쳐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며 회수로봇을 설치했다. 구청 1층 로비 카페 '사과나무'를 비롯해 인근 6개 카페에 다회용컵 총 3000개를 배부하고, 대당 1600여만원 수준의 회수로봇을 월 100만원씩 대여료를 주고 설치했다.

회수로봇을 이용하려면 몇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다회용 컵에 찍힌 QR코드를 기계에 인식시킨 뒤, 컵 뚜껑과 컵을 분리해 회수대에 놓고 기계가 컵을 스캔하기를 기다린다. 이후 기계가 '이 컵은 회수 가능한 컵이다'는 문구를 띄운 뒤에야 컵 회수가 완료된다. 이 과정은 모두 1분 남짓이 걸린다.

하지만 서구청 직원들은 "점심시간 1분, 1초가 소중한 마당에, 옆에 놓인 쓰레기통에 버리면 3초도 안 걸릴 일을 구태여 시간을 들여, 줄을 서 가며 버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구청은 기계 옆에 쓰레기통을 별도로 설치하고 다회용 컵을 버릴 수 있도록 했는데, 오히려 회수로봇을 더욱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3개월여동안 회수로봇은 936개 컵을 회수한 반면 쓰레기통으로는 6배에 달하는 6509개 컵이 회수됐기 때문이다.

이 로봇은 광주 동구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 동구 동명동 스타트업빌 등지에도 설치됐는데, 동구청의 경우에도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1513개 컵을 회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청 관계자는 "다음 달에 속도를 향상한 신규 기기를 들여놓을 예정이다"라며 "회수로봇 자체의 효용성보다는 다회용컵 재활용, 환경보호의 큰 차원에서 의도를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법원, 日기업에 '공시송달' 명령…강제동원 소송 5월 재개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게 공시송달로 법원 서류를 전달하고 오는 5월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과 10월 일본기업에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재판이 시작되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재판을 강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기업들은 소송장을 송달해도 대응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 측에 소송장을 보내도 피고 기업에 전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박성윤 김유경)는 송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최근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고 5월11일 재판기일을 잡았다.

송씨 등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대법원 판례와 달리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송씨 등이 제기한 소송이외에도 김모 씨 등 피해자 6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도 공시송달을 명령하고, 첫 변론 기일을 같은 날인 5월 11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이끌 주요 보직 인사

전남도교육청은 '포용과 미래'에 초점을 둔 민선 4기 주요 보직 임용 대상자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직개편이 반영된 이번 인사에서 미래교육과장에는 박준 미래인재과 장학관이 임명됐으며 학생생활교육과장에 박정애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선임됐다.

또 체육건강과장에 박재현 체육건강과 장학관, 진로교육과장에 김은섭 미래인재과장, 교육자치과장에 김여선 혁신교육과장, 교육연구정보원장에 오은주 창의융합교육원 교육정보부장이 내정됐다.

교육연수원장은 한경호 여수고 교장, 화순교육장에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장흥교육장에 정순미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강진교육장에 이병삼 삼호고 교장, 영광교육장에 고광진 창의융합교육원 자연탐구원분원장, 완도교육장에 김정선 순천전자고 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요 보직 인사는 민선 4기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원년임을 감안해 역량과 평판을 두루 갖춘 참신한 인물을 발탁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조직개편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전남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